

돌봄교실 주변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미미'

SOCIETY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광주·전남 내부 설치 2만5606대 중 60대 불과 "대다수 복도·계단... '김하늘양 참변' 떠올려야"

광주·전남지역 학교의 돌봄교실 주변에 설치된 CCTV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광주·전남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147개교에 설치된 CCTV는 2만5606대(광주 7407대·전남 1만8199대)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580개교(광주 155개교·전남 425개교)에 8399대(광주 2461대·전남 5938대), 중학교 341개

교(광주 91개교·전남 250개교)에 7000대(광주 2216대·전남 4784대), 고등학교 211개교(광주 68개교·전남 143개교)에 9823대(광주 2602대·전남 7221대), 특수학교 15개교(광주 6개교·전남 9개교)에 384대(광주 128대·전남 256대) 등이었다.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보면 실내 1만82대(광주 3000대·전남 7082대), 실외 1만5524대(광주 4407대·전남 1만1117대)다. 하지만 돌봄교실 주변보다는 복도와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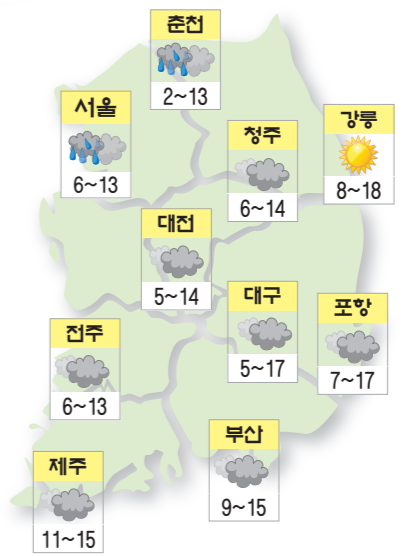
단 등에 주로 설치돼 있다. 실제 실내에 설치된 CCTV 중 돌봄교실 주변에는 총 60대(광주 17대·전남 43대, 0.2%) 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40대(광주 9대·전남 31대), 중학교 8대(광주 4대·전남 4대), 고등학교 5대(광주 3대·전남 2대), 특수학교 7대(광주 1대·전남 6대) 등이다. 설치 비율로 보면 복도 및 계단 6204대(24%), 로비 999대(3.9%), 강당 및 체육관 244대(0.95%) 등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교실 77대(0.3%), 보건실 48대(0.18%), 시청각실 38대(0.14%) 등으로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학교 안

전 대책은 각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때문에 학교 내 CCTV 설치는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CCTV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외부 출입로 외에는 특정 지역이 언급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도 없다. 더구나 CCTV를 설치하려고 해도 학교의 장이 사전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현재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닌 현실이다. 전국적으로도 돌봄교실 주변에 설치된 CCTV 수는 전무한 상황이다. 초·중·고·특수학교 내부에 설치된 CCTV 3만7008대 중 돌봄교실 주변에 설

치된 CCTV는 1767대로 4.7% 수준이다. 김용태 의원은 "고 김하늘양 참변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안 개정을 통해 복도 및 계단, 돌봄교실 등과 같이 교사와 학생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故) 김하늘양 사건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교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국회에서도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의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48 달맞이 16:44
맑음 18:37 달맞이 05:50



광주	7~14
목포	6~12
여수	7~14
순천	6~16
구례	5~16
광주	5~14
임도	6~15
흑산도	7~11
고흥	4~15
진도	5~13
목포	00:58 / 13:41
여수	06:20 / 18:56
	08:32 / 20:41
	02:02 / 14:35

"국가보훈부 사과해야" 규탄 목소리 오월 단체 등 "尹 비판 성명,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

오월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이유로 압박을 가한 국가보훈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는 11일 "보훈부는 5·18단체에 보낸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5월 단체들이 12·3 계엄 뒤 성명서를 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묻지 않고 자 했다면 문제 제기는 이미 수차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문에서 보훈부는 공법단체의 정관에 포함된 '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항 등 관련 근거를 들며 공법단체가 발표한 성명서가 관련 법령과 정관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문제는 보훈부가 공문 발송 전 공법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로 "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나. 성명서 원본을 보내라",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 내란수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등 발언을 한 점, 공법단체 항의에 "용산에서 난리가 났다", "용산에 보고해야 한다" 등의 언급을 했다는 점이다. 오월단체는 "5·18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한 사실이 없다. 이번 성명서는 정치적 중립의무와 무관하다"며 "5·18단체는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직접적 피해자 단체다. 불법 계엄을 일으킨 자의 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보훈부는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을 수립하고, 향후 5·18민주화운동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5·18 단체의 정당한 주장에 제갈을 물리려는 보훈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5월 단체들이 12·3 계엄 뒤 성명서를 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묻지 않고 자 했다면 문제 제기는 이미 수차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문에서 보훈부는 공법단체의 정관에 포함된 '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항 등 관련 근거를 들며 공법단체가 발표한 성명서가 관련 법령과 정관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문제는 보훈부가 공문 발송 전 공법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로 "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나. 성명서 원본을 보내라",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 내란수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등 발언을 한 점, 공법단체 항의에 "용산에서 난리가 났다", "용산에 보고해야 한다" 등의 언급을 했다는 점이다. 오월단체는 "5·18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한 사실이 없다. 이번 성명서는 정치적 중립의무와 무관하다"며 "5·18단체는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직접적 피해자 단체다. 불법 계엄을 일으킨 자의 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보훈부는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고리쇠 수액 채취 11일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암산 자락에서 가인마을 주민들이 '신비의 약수' 고리쇠 수액을 채취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속속 드러나는 아파트 관리비 수억원 횡령 정황

인터넷뱅킹 기록 조작 허점 노려...10년간 '아름아름' 25년차 경리직원 잠적...부실 회계감사 등 제도 한계

15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수억원대의 관리비를 빼돌려 잠적한 가운데 횡령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1일 광주 관산경찰에 따르면 관산구에 위치한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4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25년차 경리 직원 B씨가 직원 월급날인 지난 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비 인출금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보니 1원도 없었다"며

"B씨가 인터넷뱅킹을 활용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관리비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매번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면서 출납 권한은 온전히 B씨에게 주어졌다"고 부연했다. 수사에 착수한 관산경찰이 확인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통장에는 장기수선충당금 7억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관리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마치 거래처에 보내거나 정상적인 사용처에 보낸 것처럼 통장 기록을

조작해 의심을 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B씨는 잔액증명서 등 회계 자료·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제도적 감시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감사의 경우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가 많은 데다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이뤄지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작성하고 꾸며놓은 서류는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내역을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회계 내역을 속인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h4415@gwangnam.co.kr

마약 상습투약 40대 구속

마약류 투약으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1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를 위한 혐의로 40대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A씨는 치료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검거됐으며 간이시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자택에서는 투약 기기와 필로폰 0.1g이 발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류 투약과 소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 경찰은 마약 판매처와 유통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이산하 기자 goback@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대로 173 대연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